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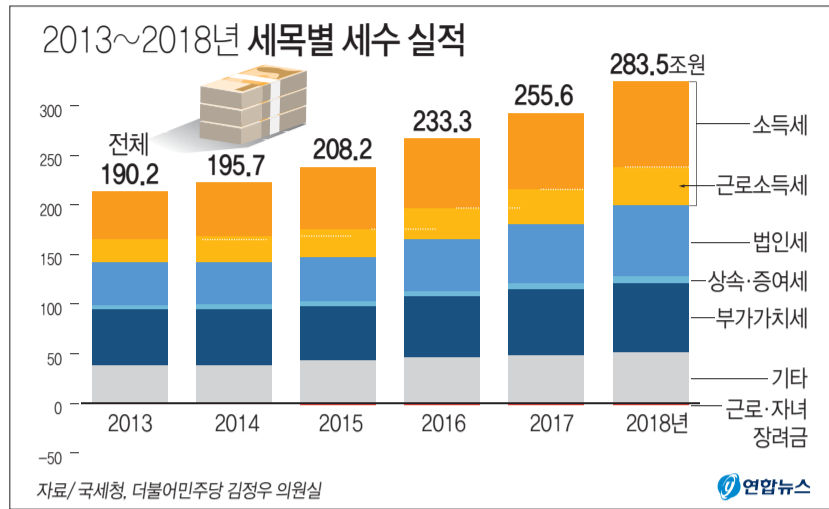
6년간 개인 소득세 78%나 늘었다… 법인세는 62% 증가

개인·법인 세수 실적 분석

소득세 세수 48.4조→86.3조
법인세 43.8조→70.9조 늘어
작년 세수격차 15.4조 벌어져

최근 6년간 개인의 세 부담 증가율이 기업의 세 부담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개인과 법인 세수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3~2018년 6년간 개인이 내는 소득세 세수는 78.3% 증가했고, 기업이 내는 법인세 세수는 61.8% 늘어났다.



소득세 세수 실적은 2013년 48조 3833억원에서 2014년 54조1018억원, 2015년 62조4397억원, 2016년 70조 1193억원, 2017년 76조8345억원, 2018년 86조2887억원으로 증가했다.

법인세 세수 실적은 2013년 43조 8548억원에서 2014년 42조6503억원, 2015년 45조295억원, 2016년 52조1154억원, 2017년 59조1766억원, 2018년 70조9374억원으로 늘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세수 격차는 2013년 약 4조5000억원에서 2018년 약 15조 4000억원으로 벌어졌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에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25.4%와 23.1%였으나, 2018년에는 각각 30.4%와 25.0%로 격차가 커졌다.

2013~2017년 5년간으로 한정해 보면 소득세 세수는 58.8% 늘었고 법인세

세수는 34.9% 늘어 2013~2018년 6년간 기준보다 개인과 기업의 세 부담 불균형이 더 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2011~2015년 5년간 소득세 세수는 46.3% 늘고 법인세 세수는 0.4% 늘어 불균형이 더욱 심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18년부터 개인과 기업의 세 부담 불균형이 완화되는 추세”라며 “2018년 과표 3천억원 이상 구간 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이 있었던 만큼,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대기업의 적정한 세 부담으로 법인세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文, 23일 중앙아 순방 후 남북회담 이뤄질 듯”

(4월16일~23일)

중앙아 3국, 고려인 동포 다수 거주 남북정상회담 지지국 늘리기 전략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4·11, 워싱턴) 때 ‘조속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한 가운데,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국빈방문 후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이 여론에서 제기됐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남북정상회담은 그동안 3차례(작년 4·27~5·26~9·19) 진행됐다.

익명을 요구한 정계 관계자는 14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문재인 정부 들어 4번째 진행될 남북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국빈방문 후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국을 국빈방문하는 이유는 ‘신북방정책’ 및 ‘고려인 동포들과의 역사-문화적 유대’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해서 “중앙아시아 3국은 북한과 이렇다 할 관계를 형성한 나라들이 아닌 것으로 안다. 달리 말해, 문 대통령의 이들 3국 국빈방문은 4차 남북정상회담과 무관하지 않다.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는 국가를 늘리는 일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북방정책은 중앙아시아 3국을 비롯해 러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미국·중국(G2)에 의존 중인



남북정상이 작년 4월27일 정상회담 전 사전회담을 하는 모습. /청와대

현재 외교를 다변화시키려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또 문 대통령이 방문하는 중앙아시아 3국에는 고려인 동포들이 다수 거주 중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미국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때 “북미간 대화가 톱다운 방식으로 전개되도록”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톱다운 방식은 정상간 담판을 뜻한다.

나아가 현재 북미간 대화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실정이다.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으나, 북미정상은 비핵화를 놓고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4차 남북정상회담은 ‘북미간 비핵화 담판’을 위한 문 대통령의 4번째 중재 행보인 셈이다.

한편 ‘조속한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우리 정부에서 ‘조속한 대북특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4차 남북정상회담을 위

한 대북특사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또 다른 정계 관계자는 14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4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파견될 대북특사로 작년 두 차례 평양을 다녀온 정 실장과 서 원장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같다. 눈여겨볼 점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북특사도 정계에서 거론되는 것”이라며 “아무래도 이번 대북특사는 최근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의 트럼프 대통령 의중을 김 위원장에게 전하고, 우리 정부의 비핵화 중재안을 꺼내야 하는 점에서 굵직한 여론 인물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북특사 시기 관련) 문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7박8일간 중앙아시아 3국을 방문하는데, 이 기간 대북특사를 파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

중반 향하는 4월 국회… 정상화 ‘안갯속’

민생법안·추경 등 현안 산적

4월 임시국회가 중반을 향하고 있지만, 여야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 등을 둘러싸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생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 등에 합의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8일 4월 국회를 소집한 후 일주일 가까이 의사일정도 잡지 못했다. 4월 임시회에서 처리가 가장 시급한 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제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이달부터 주52시간 근로제의 처벌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산업현장은 혼란을 겪는 실정이다. 하지만 여야는 단위기간 확대 여부와 결정체제 개편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않고 있다.

4차산업혁명 관련 규제 완화법안도 산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과 스마트시티 활성을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 등이 묶여있다. 또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유치원 3법, 택시업계 지원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도 4월 임시회에서 다뤄질 주요 안건이다.

추경예산도 미세먼지 대응과 포항지진 후속대책, 경기하방 위험 선제적 대응 등과 관련한 주요 현안이지만,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더라도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국회가 의사일정을 잡지 않을 경우엔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과 추경논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도 불가능하다.

4월 국회에 먹구름이 끼자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1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중국 상하이로 떠나며 협치를 예고했다.

/석대성 기자



문화상 국회의장(가운데)이 지난 8일 오전 국회 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참석자에게 악수를 권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향소심서도 중형선고?... MB, 재수감 위기

김성우 前 다스 사장
“다스는 MB것” 진술

황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민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히며 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까지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법정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향소심에서도 유죄와 중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지난 12일 서

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 향소심 공판에 출석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진술했다. 특히 “다스 설립 당시부터 이 전 대통령에게 경영상황을 보고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분식회계를 지시하기도 했다”라고 증언했다.

김 전 사장은 “다스에서 이익이 많이 나면 현대자동차가 납품가를 인하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면서 “장부상 이익을 줄여야 한다”라고 이 전 대통령

이 지시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아울러 “1990년대 초부터 다스에서 이익이 나기 시작했고, 매년 통상 20억원의 비자금은 고 김재정씨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라고 진술했다.

김 전 사장의 이날 진술로 이 전 대통령 측은 사실상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치명타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민었던 측근들이 법정에서 잇따라 등을 돌리고 불리한 진술을 내놓으면서 무죄입증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장용진 기자 ohngbear@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탈세혐의’ 檢수사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56)이 탈세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 초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이 조세관련 범죄로 고발한 경우 검찰은 반드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14일 검찰과 세무당국에 따르면 전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다. 앞서 전 회장은 지난

해 4월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삿돈 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구속된 뒤,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검찰의 기소내용 가운데에는 ‘포르쉐 911’ 등 최고급 슈퍼카를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빌린 뒤 리스료와 보험료를 납품대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등 빼돌린 회삿돈 대부분을 사적인 용도에 사용했다는 혐의도 포함돼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